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73
----------	------

발의연월일 : 2024. 8. 20.

발 의 자 : 박성훈 · 우재준 · 박충권
김종양 · 서지영 · 곽규택
김대식 · 조배숙 · 임이자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 에스크로 업체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거래대금 지급의무)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화등의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재화등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5(거래대금의 예치)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거래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예치기관의 장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 대금을 예치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재화등을 수령한 경우

2.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비자가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등의 결과”라 한다)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거래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소비자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 ⑥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분쟁조정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거래 대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동의를 받아 거래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거래 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거래 대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0조의4(거래대금 지급의무) ①</u> <u>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수</u> <u>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u> <u>화등의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u> <u>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u> <u>다.</u></p> <p><u>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u> <u>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거래</u> <u>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u> <u>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u> <u>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u> <u>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u> <u>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u> <u>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u> <u>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u> <u>하여야 한다.</u></p> <p><u>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u> <u>제2항에 따른 거래 대금 및 이</u> <u>자를 상품권이나 재화등으로</u> <u>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신 설></u></p>	<p><u>제20조의5(거래대금의 예치) ①</u> <u>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u> <u>급한 거래 대금을 대통령령으</u></p>

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예치기관의 장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 대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재화등을 수령한 경우

2.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비자가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통

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등의 결과”라 한다)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거래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
우

2.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소비자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⑥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 또
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분쟁
조정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거
래 대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
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거
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동의를
받아 거래 대금의 반환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
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
일 이내에 거래 대금을 소비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거래 대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